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 에너지 대전환 '물꼬'

### 전북자치도-기후부, 전북형 에너지 경제 모델 구축 햇빛소득마을 조성·발전 수익 지역 환원 구조 확립 에너지 전환 성과 도민 소득 증대로 직결 '선순환'

전북특별자치도가 타운홀미팅을 마중물 삼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에너지 대전환의 물꼬를 튼다.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 산업용수 확보, 자원순환 산업 메카 육성까지 전북의 미래 전력이 국가 기후·에너지 정책과 맞물리며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기대가 모아진다.

10일 도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타운홀미팅을 통해 전북에 재생에너지 12GW 이상을 공급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는 2029년까지, 2단계는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과 부안 앞바다의 해상풍력도 실증단지 수준을 넘어 2.4MW를 본격 조성하고, 배후 지일항만도 함께 만들어 해상풍력 전진 도시 전북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새만금 수문 증설과 함께 조력발전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에 전북도는 수상태양광 접속선로를 기존 15km에서 2km로 단축해 2,000억~3,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고창~부안 해역에 총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군산항과 울 하반기 개장하는 새만금항 신항(2선석, 5만톤급)을 해상풍

력 기자재 운송 거점으로 활용한다. 조력발전도 만경강·동진강 유역 2개소에 추진해 224MW 규모의 발전용량 확보와 수질 개선·홍수 예방 효과를 동시에 거둔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전기요금과 물값을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북에 분산 특구를 조성하고 지역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용담댐에서 하루 30만 톤, 금강하굿둑에서 30만 톤을 더해 총 60만 톤의 용수를 전북 산업 발전을 위해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토대로 충분한 전력·용수·부지를 갖춘 새만금을 전국 최초 RE100 전용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광주·구미·부산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서 공백 영역인 첨단 케미컬 소부장 분야를 전북이 채워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도 내세운다는 복안이다.

김 장관은 해외로 유출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국내에서 순환시켜 리튬·코발트 등 핵심 광물을 고순도로 추출하고 태양광 패널 재사용과 폐플라스틱의 열분해유 전환 산업도 전북을 중

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 패널 재사용 분야에서 가장 큰 공장이 전북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대량 폐기될 패널들이 다시 선순환 사이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생산·재활용·고부가가치화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고창 한전 전력시험센터는 규모를 키우고 시설을 개방해 전력 기술 기업의 집적지로 육성하고, 정읍 방사선연구소 산업화도 추진해 기반 시설을 전라 자선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새만금 대규모 수상태양광이 완성되면 주민 참여형 에너지 펀드를 만들어 전북 도민들이 일반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특정 발전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전북 도민의 소득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 구조 확립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무엇보다도 도민 실질 소득 증대로 직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타운홀미팅을 계기로 기후부의 에너지 전환 구상이 전북의 실행 계획과 본격적으로 맞물리게 됐다"며 "서해의 바람과 햇빛이 전기가 되고 일지리와 소득이 되는 전북의 미래를 만드는 데 도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부실기업 자광 특혜 행정 중단” 김성희 전 국회의원 등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관계자들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회 기자회견장에서 ‘부실기업 자광 특혜 행정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 내란 방조 의혹 제식구 감싸기 '눈살'

### 도내 일부 시민단체·도청 공노조 특정 후보 편향성에 전공협·도민 등 비판 잇따라 도청 공노조 “공무원 권의 보호 위해 내란 결정... 오해 불러일으킨 것에 조심할 것”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12.3 내란 진실규명을 놓고 도내 일부 시민단체와 전북도청 공무원 노조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 특정 후보에 대한 편향성이 날로 노골화된 가운데 이들에게 향한 상당수 도민들의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일 입장을 내고 “전북도청 노조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복판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지사와 이를 감싸는 도청 공무원 및 시민단체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이 단체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보인 행태를 두고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심각한 언어 남용이라고 지적한 뒤 전북도 공무원노조 주장은 터무니 없는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소리는 유튜브를 통해 이원택 의원의 말을 인용, 전북에서 터져 나온 내란방조 의혹 논란을 제기한 뒤 35사단 협조체계를 유지했다는 문건과 계엄포고령으로 지방의회 무력화 상황을 전제로 행정준비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 논란은 더욱 더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송상재 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타 후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들의 권의 보호를 위해 내란 결정”이라며, “여러곳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심하여 공무원 권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특히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행한 지난 2024년 12월 3일 불법계엄과 관련해 김관영 지사와 전북도의 당시 35사단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 및 20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준비를 비롯한 상황에 대해 진상을 밝히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특정 후보의 말과 같은 맥락에서 내란 프레임 규정하는 것은 물론 선거 너거티브로 치부해 버려 분위기를 망각한 지적과 함께 제식구 옹호 및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14개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북시군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공협)는 9

##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기획예산처 예타 대상 선정

### 총사업비 1354억원 규모 투입 김제 심포항 일원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사업이 기획예산처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과학관은 김제시 심포항 일원 부지 2만 4,054㎡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1,354억원이다. 해양도시와 해양신산업을 주제로 전시·교육·체험 기능을 갖춘 국내 최초의 해양도시 특화 과학관으로 계획됐다.

과학관이 건립되면 해양도시와 미래 해양산업을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가 해양교육·체험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RE100 에너지

전환 해양에너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관련 기술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돼 해양 분야 인재 양성 및 산업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관은 새만금 산업단지, 스마트 수변도시, 해양관광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 해양교육·관광 거점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해양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과거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서 기존 해양문화시설과의 차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차례 탈락한 바 있다. 이후 전북도는 사업 콘셉트를

‘해양생명 중심 전시시설’에서 해양도시·해양에너지·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체험하는 미래형 과학관으로 재편하고, 전문가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보완해 왔다.

도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해양수산부, 김제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응과 사업 계획 구체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민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국립해양도시과학관은 해양에너지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해양도시 비전을 담은 국가 프로젝트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